

‘경제동맹체’ 인식 공유... 동반성장 협력사업 발굴 나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성과

4일 전북 정읍에서 7년만에 한 자리에 선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장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시간 30분 정도 만난 이들은 그동안의 간극을 극복하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보다 완벽한 구축, 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 등 각각 지자체의 미래전략산업 협력 방안 마련, 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자원의 실질적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을 약속했다.

사전 논의 과정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의 정서적 괴리감을 줄여줄 수 있는 교류·협력에 공감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추려내 단체장들이 부담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호남권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인구·경제 규모를 가진 영남권, 수도권에 가까워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는 충청권 등과 비교해 격차가 계속 벌어져 침체되고 있다. 청년 이탈, 고령인구 증가, 경제적 침체, 미래 경쟁력 우려 등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고도 각자도생에 나서 권역 내에서 경쟁하기도 했던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경제동맹체’임을 인식하고 공통분모를 찾는 것만으로도 호남민들에게 안도감과 함께 기대감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단체장들이 각자 할 일과 함께 할 일들을 구분하고 앞으로 권역 경제의 성장·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호남권 전체를 위해 주로 광주에 자리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이 앞으로 전북에 대해 질적·양적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지역 테크노파크 간 연계 협력 사업을 구상·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인구는 1970년대 632만명(전체 인구의 20.5%)에 이르렀다가 현재 495만명(전체 인구의 9.6%)으로 5분의1 이상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인구는 3083만명에서 513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인구, 기업, 자본 등 모든 자원이 몰리며 지방 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호남이다.

인구가 사라지면서 정치적·경제적 동력도 급감해 획기적인 국가 재정의 투입 없이는 성장·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의 세종시에 이어 호남권에도 제3의 수도 조성, 미래 전략 산업 및 국가 공공사업의 호남 우선 배정 등 낙후를 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미래전략산업 협력 방안 마련
관광·농어업 등 자원 연계 약속

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지자체가 하나가 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호남권 위기와 대처 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이날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의 새로운 미래로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초광역 협력산업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내 초광역 교통망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군산-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로, 현재 경기 화성-군산-새만금을 운행하는 노선을 목포까지 연장해 서해안권의 산업·물류·교통벨트를 구축해 나간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를 조속히 구축해 호남 내륙과 남동권 해양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전남의 국내 최초 아우토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 고속도로’와 전주에 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조성’도 포함됐다.

또 호남만의 자원과 경쟁력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은 호남권이 수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신산업으로, 분산에너지 시대 대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연관기업 유치 등에 공동 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도 호남권이 앞서갈 수 있는 유망한 미래 첨단산업의 하나로 보고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여기에 유서 깊은 역사·문화 자원,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공유하며 호남권 관광벨트를 구축해 3개 시도의 관광상품을 연계할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공동 인바운드 여행상품 운영을 통한 해외 관광객을 함께 유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이날 약속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통해 호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목표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 협력·교류를 통한 공간대형성 ▲경제동맹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창출 및 시도인 공유 ▲정부·여당 및 야당과의 소통 및 과제 반영 ▲상호 배려 및 성장 지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원 주자들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있다. /연합뉴스

尹, 김홍일 사퇴 하자마자 이진숙 지명...공영방송 이사교체할 듯

민중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野, 임명 이후 탄핵 추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어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버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틀 만에 곧바로 후임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방통위 수장 공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용’ 인선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전 사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방통위는 일 년도 채 안 돼 수장이 두 차례나 사퇴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취임 석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지난 2일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스스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를 만인 이날 MBC 방송기자 출신이자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언론 특보를 지낸 이 후보자를 후임자로 내세웠다.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이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등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정당 동 술자리’ 보도 논란,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논란 등을 열거하며 “언론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흥기로 불리기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공영언론이 민주노동 등 정권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를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정상화하고, KBS·MBC·EBS 등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선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 이사인 교체는 방송장악으로 규정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노종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전 사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위한 기교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을 지내면서 ‘전원 구조’ 오보에 책임 논란이 있었고, MBC 민영화를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지명하는 것은 ‘MBC 장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만일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야당이 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경우 방통위는 또 아무 마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탄핵 추진 → 방통위원장 사퇴 → 새 후보자 지명’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방지...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

지방의회의 선심성 포상 관행을 근절하고 성범죄자와 음주 운전자 등의 부적격자에게는 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 1411건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음주운전자나 성범죄 등

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급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제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